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무웅



‘빠라’라는 단어는 원래 영어의 bill을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불완전한 읍은체에 맞추어 어색하게 표기한 것을 다시 우리가 경음화해서 받아들이 좀 이상한 외래어이다. 국어사전에는 전단(傳單) 또는 전단지라고 풀이되어 있다.

다. 며칠 전 나는 출판사 측의 호의로 그 책의 가제본(假製本)을 얻을 수 있어서, 한동안 거기에 빠져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속을 헤매다 나왔다.

문자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빠라의 개념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앞에서 내가 살펴본 내용보다 이 책 제목의 것이 훨씬 광

에 대한 일본제국의 ‘무조건항복’을 감히 ‘정전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뿐더러 연합군이 등장 진주해오는 것도 절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제2항은 “조선이 독립한다 해도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이 내지로 철수하기까지는 법률과 행정 모두 현재대로이다”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까지는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여전히 일본이 쥐고 있다는 것을 조선 헌법대 사령부는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다.

위의 포고문과 연관지어 눈에 띄는 문구는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회’ 명칭의 ‘급고(急告)’이다. 그것은 이렇게 시

을 이 문건은 알려주고 있다.

미 점령군 사령관 하지 중장의 ‘포고 1’이 발표된 것은 인천상륙 전인 9월 2일이고 삼팔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선표는 9월 9일이지만, 그것은 이 책에 없다. 다만 9월 29일자 발표가 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의 선입견을 깨는 것은 발표문이 ‘조선인 계구어!’로 시작하는 국한문혼용체의 것과 ‘告韓國民諸彥’으로 시작하는 일본문의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조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과연 포고문의 (바)항은 “경기도는 현재 미군정하에 있으며 일본인 경찰관은 차차 파면되고 그 대신 조선인 경찰관이 배치되고 있는 중인 것”이라 하여, 그제야 경찰관이 일인에서 조선인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배치된 조선인 경찰이 대부분 일제시대 일본인 상관으로부터 훈련 받은 인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8·15 직후의 정치풍경이 이렇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일제의 경찰력이 버티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각계각층에서 각양각색의 정치적 욕구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었음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그 분출의 시점으로부터 66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때의 정치적 욕구에 어떻게 대답해 왔던가, 이제는 그것을 물어야 한다.

〈영남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15 직후의 정치풍경

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1945년 8·15해방 당일부터 3년 동안 수많은 유영·무영의 기관, 단체, 정당, 개인들이 공식·비공식으로 발표한 성명서, 선언문, 호소문, 결의문, 격문, 포고문, 포스터, 표어, 전단 등 무려 443건을 수집하여 영인하고 본문을 현대문으로 번역해놓은 자료집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문건들이 많지만,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조선헌법대 사령부’ 명의로 발표된 ‘내선 국민에게 고함(內鮮官民=告口)’이라는 간략한 일본어 포고문이었다. 제1항은 “정전협정은 이제부터 시작되지만 지금 바로 연합군이 진주해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연합군

자한다: “연합군 일부가 7일에 입경할 예정이던 바 천후(天候)관계로 인하여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9월 7일로 예정되었던 미군의 서울 진입이 날짜 때문에 하루 연기되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이다.

이어서 문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시적이거나 아직 경찰력이 일본인의 장중(掌中)에 있는 것을 기회로 그들은 우리를 일본국민의 형식으로 가두 운영령에 참가시키고자 탐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45년 9월 8일 현재에도 식민지체제가 온존하고 있어서, 만약 그날 미군 환영행사에 시민들이 나간다면 그것은 애용하지만 조선인의 자격이 아니라 일본국민의 자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

NGO 칼럼



박병재

세상 관심을 잠깐 접어두고 무등산으로 삼림욕(森林沐浴)을 하러 갑니다. 땀 흘리면서 고행하러 멀리 가고 싶어도 이제는 무릎이 받쳐주질 않으니 옆드림 코가 닿는 그곳으로 갑니다. 왕복 2400원만 내고 시내버스만 타면 해결되는 나의 애인인 무등산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이 무등산 어디에 있습니까?

절기(節氣)가 해마다 대서(大翼)를 지나 말복(末伏)으로 향하면 전국 방방곡곡 유명 한 피서지는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산을 찾은 사람들은 아릅답게 나무숲을 거닐었기 때문에 산행한 다음날은 몸이 가벼습

니다. 그들에게는 힘든 산행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숲들이 무상으로 준 선물인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phytoncide)라는 천연의 살균성향균 물질 덕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던가, 피부질환인 아토피염으로 고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해수욕이나 강수욕보다는 삼림욕장을 찾아갑시다.

호남지방에 있는 삼림욕장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처음은 전남 장성군 축성면 편백나무휴양림입니다. 그곳은 한국의 조립왕 임종국(1915~1987) 선생이 30년간의 노력과 의지로 심고 가꾸신 수고덕분에 많은 사람이 치유의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편백나무 숲 속을 거닐면서 그분들께 고마움을 아로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부쩍 인기가 치솟는 곳, 전남 장흥군 억불산에 생긴 ‘누드삼림욕장’입니다. ‘누드(nude: 벌거벗은)’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장

흥하면 농·축산물이 풍부하고 바다가 가까워 먹을거리가 일등인 곳입니다. 억불산 계곡에 있는 삼림욕장은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로 목욕을 하면 심폐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가족이 화합하는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는 무등산 자락에 있는 제1수원지 계곡으로 안내합니다. 제일 먼저 증심사행 시내버스를 탑니다. 증심사 종점에서 내립니다. 내린 자리에서 증심사 쪽을 향하여 왼쪽 10시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탱자나무와 철조강이 얽힌 울타리로 싸인 늪은 기와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그 집 위쪽에 바로 1수원지 방목이 있습니다.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있습니다. 아니면 버스 종점에서 내려 곧바로 5분쯤 증심사쪽으로 올라가다가 무등산관리사무실 왼쪽 산비탈을 3분 정도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발 아래에 편백나무와 삼나무 군락지가 만나니 하듯 쪽쪽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등야구장만 합니다.

무등산 삼림목욕장

기고



김승호

어는 시대나 교육은 개인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공공 활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교육이 모든 학생들을 실력과 인격을 자닌 능력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학교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주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농어촌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로 이주한다고 하여 교육이 농어촌 황

폐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청렴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행정기관들의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당한 부정과 비리가 노출되면서 교육계에 대한 실망과 비난의 소리가 자주 들린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른 벌도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과거에 인정되었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라면 어느 편가는 중단되어야 하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법과 원칙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부정과 비리는 더욱 엄하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계 일부 비리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전남과 광주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교육관계자들의 금전적 부정,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지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모든 교육자들

은 공동의 책임감을 느껴며 맡없이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한없이 가슴 아파하면서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깨끗하게 지켜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일부 사례 때문에 학교교육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지는 만큼 그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도 크게 느끼게 된다. 교육계에 대한 불만족의 정도가 큰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한편으로 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혼양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교육보다도 직업적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혹은 공교육을 불신하는 사람들 중 자기 자녀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변명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만 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어른이 되어 도시위주의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방학만이라도 며칠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리고 농촌이나 어촌을 방문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직접 물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게 한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살아

도시 초·중학생들 방학기간 농어촌체험 했으면

도시의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종일 학원에서 생활하거나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방학 기간 만이라도 도시의 초·중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촌의 현실과 실정을 깨

우치게 했으면 한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조차도 모를 뿐더러 오늘날 농촌 실정과 상황들을 너무나 모르고 지낸다. 학부모들이 자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시설

삼성전자 광주공장 물량 해외이전 안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생산물량 중 30%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의 납품 물량이 급격히 줄어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들어 1차 협력업체만 3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4~5개 협력업체는 자금난으로 3개월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본사의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올해 생산 계획을 지난해보다 30% 낮게 잡았다고 한다. 감소분은 멕시코와 폴란드,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으로 넘겨 충당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량 감소가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광주사업장은 전체 생산물량의 60%가 수출돼 이전설이 사실이라면 올해 30%에 이어 내년에도 30%가 해외로 옮겨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부품의 95%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파장은 광주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사업장 측은 생산물량의 해외이전은 불가피하며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전환해 매출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0만 원 이하 저가형 청소기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로봇청소기로 매출액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삼성전자와 고락을 같이 해온 협력업체들을 한순간에 내몰게하는 것은 기업윤리상 응답치 못하다. 적어도 협력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세계의 기업’ 삼성전자가 할 일이다.

협력업체들도 대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일본 등지로 납품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가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떠들 게 아니라 협력업체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태풍 ‘무이파’피해 복구 만전 기해야

제9호 태풍 ‘무이파’가 광주·전남지역을 덮쳤다. 지역 곳곳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폭우를 동반한 순간 최대 풍속 40m/s의 강한 바람이 강타한 광주·전남지역은 아직 피해집의 복구 작업이 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상처를 남겼다.

8일 오후까지 드러난 피해만도 사망·실종 3명에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닥친 완도, 진도, 신안, 장흥 등 서남해안 양식장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뿐만 아니라 수확기를 눈 앞에 둔 과일과 농작물 피해가 너무 크다. 추석 대목 출하를 앞둔 배, 단감 등 재배지 682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수백ha의 논이 침수됐다. 봄철 이상저온 등으로 가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과수농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농어민들의 시름이 아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과일과 채소류 등의 시중 물가가 벌써 들쭉이고 있다. 물과 고공엔 속이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추석을 앞둔 서민들엔 얹힌 데 덮친 격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막대한 손실을 입은 농어가의 보상과 재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농수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가격 폭등을 막아야 한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은 불안한 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이변은 이제 이번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는 앞으로 잦을 수밖에 없다. 유비무환의 방재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무이파’ 태풍도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이동 속도와 규모를 제대로 예측 못하고 대응도 늦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속수무책으로 자연재해를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절코 우리가 국력이 뒤져서 구호물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대국적’ 차원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의 지원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4년 한강물에 돼지가 등등 떠다녔던 서울지역 수해는 200여명이 숨지고 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했다. 수해 피해도 컸지만 우리 정부는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남한 동포에게 쌀과 시멘트, 약품 등을 보내고 싶다”는 제의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해 큰 화제를 낳았다.

북한의 ‘떠보기식’ 제의를 당시 과단성이 뛰어난 전두환 대통령이 덜컥 수용하겠다고 밝혀 되레 북한이 혼쭐했다는 뒷얘기도 있었다.

남측은 북한보다 국력에서 앞서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수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도 대부분 이에 공감했다. 북한은 자신들보다 버겁던 형편에 남측에 보내줄 물자를 수집하느라 공공거짓과는 후일담이 전해 온다.

북측의 지원물자는 화해의 메신저가 됐다. 북한의 물자지원 이후 교착상태

에 빠져있던 남북관계가 잠시 부드러워진 것이다. 북한의 쌀과 시멘트가 남한에 도착한 뒤 남부 각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이 잇달아 개최됐고 한동안 긴장이 풀려졌다.

지난달 큰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호물자 지원이 재개됐다. 정부가 수해 지원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위해 50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의약품의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일반적 인 대북지원이 아니라 점을 강조하기 위해 쌀과 밀가루 등 군사 식량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제

외했다. 정부의 조치는 과거에 비추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융합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이번 구호물자가 환산상 출(惠難相恤)에만 그칠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꼬여있는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줄지 주목된다.

【특이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광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개발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